

일본 민주당의 주요정책 -지역주권-

민주당 정권의 정책 중 핵심적인 것은 지역주권에 관한 정책이다. 여기서는 지역주권을 둘러싼 논의와 민주당이 세운 공약에 대해 살펴본다.

□ 지역주권의 기본이념

- 관료체제 해체, 중앙정부의 역할은 외교 및 안보에 특화, 지방에 권한 이전
- 국가보조금 폐지, 지방의 자체재원 전환
-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분담금 폐지
- 유류세 등 잠정세율 폐지
- 고속도로의 단계적 무료화
- 우정사업 재검토 등

□ 지방 자체재원의 실정

- 2009년도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세입, 세출 모두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50%에 불과, 권한과 세원을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철저히 하려면 이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함
 - 아직까지 구체적 대책에 대해 나오지 않고 있음

□ 고속도로 무료화의 실정

- 오히려 연휴 기간의 철도이용자 감소 및 교통정체 발생을 유발
 -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무료화를 진행했음에도 지방에

그만큼의 매력이 없는 것이 실정

고속도로 주말요금 1,000엔 도입 효과

ETC 이용자 1인당의 소비금액(연휴)	효과 ○	+1,714엔
고속도로 이용자수	효과 ○	+36%
철도 이용자수	효과 X	▲6.6%
CO2 배출량	효과 X	+204만t
교통체증 발생 횟수(연휴)	효과 X	94%증가

□ 우정사업 재검토

- 2007.10월에 우정사업이 민영화되었으나 이것을 재검토하는 움직임, 2009.10.20에 일본우정그룹(일본우정, 우체국저축은행)의 주식 매각을 동결하는 ‘우정주식처분동결안’을 결의
- * 우정사업이 민영화됨으로써 이익우선주의에 의한 우체국의 통폐합 및 직원 삭감 실시, 이에 따라 지방에서의 편의성 제공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임
- * 한편 우정사업이 다시 국영화되면 국고는 파탄될 우려가 있으며 10조엔 규모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함

□ 향후의 계획

- 민주당 정권이 내세우는 지역주권 추진조직으로 ‘지역주권 전략회의’가 2009.10.17 신설
- * 종래의 지방분권 개혁추진위원회와 지방분권 개혁추진본부의 역할을 담당
- * 의장은 하토야마 총리, 부의장은 내각부 특명담당이고 총무상인 하라구치(原口一博) 대신 등, 11월중에 첫 회의 예정

<참고 문헌>

주간 다이아몬드, ‘특집 민주당경제 총점검’ (2009.11.4)